

금산분리의 논리와 적용 - 핀테크를 중심으로

2021. 5. 26

한국금융학회-한국금융정보학회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의의와 구조
- III. 인터넷전문은행 논의
- IV. 핀테크에의 적용
- V. 결론

I. 서론

- 문제의 의의
 - 은행과 산업의 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 국내에서는 주로 은행법상 은행과 산업의 분리로 제도화
 - 금융지주회사규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규제에도 같은 취지
- 금산분리규제의 취지
 - 은행을 시스템위험의 원천으로 보는 기관별 시스템위험에서 출발
 - 시스템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금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적용범위의 명확화를 고려할 필요
- 금산분리규제의 적용
 - 금융업구조의 변화
 - 금융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판매주도의 금융업구조개편/지급수단의 확대
 - 금융규제의 대상으로서의 금융회사의 제도적 의의

II. 의의와 구조

1. 의의

- “은행과 상업의 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 금융위험과 산업위험의 분리에 기본취지
- 금융법상 조직규제의 일부로서 은행의 보유규제와 은행의 업무범위규제
 - <1>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2>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3> 자회사의 출자한도 및 업무범위규제로 제도화
-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관형 시스템위험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
 - 구체적으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2. 취지

1) 의의

- 은행과 산업의 결합을 통한 ① 이해상충, ② 위험의 전파, ③ 경제력의 집중 방지
- 핀테크와 금산분리의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논의의 대상
 - Mehrsa Baradaran, "Reconsidering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Vol.80, 2012, pp385-441
 - Cristie Ford, "The Banking/Commercial Separation Doctrine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19)[unpublished]
 - 加藤貴仁, 「銀行とFinTech企業の關係に関連する規制の新たな展開の可能性」, 『金融法研究』 第36号, 2020, 96-113면
 - 加藤貴仁, 「アメリカにおける『銀行と商業の分離』に関する規制の現状」, DP 2020-5, 金融庁金融研究センター, 2020.11 등
- 이러한 관점에서 핀테크와 전통적인 금융업과의 비교도 중요

2) 위험의 전파

- 특히 재무적 기초가 자회사인 은행 자산에 구속되는 지주회사보다 그 수익구조가 자회사인 은행의 취약성에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은 일반사업회사가 '힘의 원천'으로서 우월하다는 주장(Baradaran(2012), p414)
 -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통한 모회사나 은행의 위험 관리의 가능성도 주장될 수 있음
- 그러나 금산분리의 근거인 이해상충이나 위험의 전파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음

3) 일반사업회사규제와의 구별

- 은행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그 주주인 일반사업회사에 대한 업무규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
 - 특히 국내에서는 금산분리원칙의 또 다른 적용형태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러한 관점에서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음
 - 그러나 금융그룹감독과 일반기업규제는 차원이 다른 규제임
 - 구체적인 내용은 정순섭,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법적 연구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2021년 한국상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상사법의 최신 입법과 과제”, 2021.2.26., 발표자료
<<http://www.korcla.net/Notice01/popup.asp?idx=190>> (2021.4.30 방문).

4) 행위규제에 의한 대체가능성

-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대주주에 대한 행위규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
 - 국내 산업자본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함께 고려되어야
 - 여전히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매우 부정적

5) 효율성의 관점

-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효율성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명백하지 않음
 - 이 문제는 은행의 관점과 산업자본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최근 핀테크의 발전을 수용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통신사업자에 한하여 금산분리의 예외를 인정
 -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효율성을 강조(동법 1조)

6) 판매조직에의 적용

-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의 제조가 아닌 순수한 판매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금산분리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
 - 특히 금융상품의 제조에 수반되는 자금의 수취나 공급기능이 배제될 경우 그러한 우려는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

3. 구조

1) 개관

- 구체적으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제도화
 - 은행의 지분소유 규제, 은행의 타업규제, 은행의 자회사 업무범위규제

2) 은행법

- 은행법상 은행의 지분소유 규제, 은행의 타업규제, 은행의 자회사 출자규제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 은행법은 1982.12. 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대기업의 자금고화 방지 등을 위해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규제를 도입
 - 그 후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방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
 - 은행법상 주식보유한도규제는 첫째, 금융주력자 한도를 원칙적 규제로 하고, 둘째, PEF 한도, 셋째, 비금융주력자 한도, 넷째, 외국은행 한도를 특칙으로 규정
- 은행의 업무범위규제
 -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
- 자회사 출자규제
 - 은행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음(37조 1항)
 -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같은 것으로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로 발생하는 문제는 은행이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

III. 인터넷전문은행 논의

1. 현황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증인의 요건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함(제5조))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함(제6조)
-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7조)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8조)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9조)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제10조)

2. 논의

-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4거> ■
국회 기획재정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6호) ■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
765호)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05호) ■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487호), 2016.11., 24-26면
- (3) 우리나라에서 은사분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고객이
만기예금이 대주인 모기업에 이해관계에 따라 경영권 유지 또는 계열기업의 확장 등에
이용되는 소위 은행의 자금고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재벌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은사분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모기업의
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4) 개정안은 이러한 은사분리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이를 완
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에서도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과점화
되려는 기존 은행 시장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
키려는 것임.
- 이러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일본·유럽
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비해 은사분리 규정이 엄격하지 않아 이미 ICT 기술을 가진 산업자본
이 주도 하에 금융과 ICT 기술이 융합된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었고, 일본의 Rakuten
Bank와 Sony Bank, 독일의 Fidor Bank 등 상당수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체적으로 성공적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상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4거> ■ 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6호) ■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65호)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05호) ■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87호), 2016.11., 26-28면
 - (5) 첫째, 은산분리 완화의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강석진의원안은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ICT 기업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주주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나, 대기업 중에서도 은행의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정 개인에게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개인 총수 있는 대기업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6) 둘째, 은산분리 완화의 수준과 관련하여, 두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법상 금융주력자가 은행 지분을 100%까지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주주로 참여하는 ICT 기업은 이보다 높은 금융자본과 동등한 비율의 지분까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하게 하려는 취지임.
 - 이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에 따른 현행법상의 지분보유한도 4%와 비교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지분보유한도가 50%에 이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기존 금융지주회사들의 주주 구성을 보더라도 어느 한 대주주가 50%의 지분을 가진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경영권 주도를 위해 반드시 50%까지 지분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강석진의원안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소유한 이후에 자산 증가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었을 때 금융위원회는 4%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배제하고 주식처분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이유가 될 것임.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IT기업에게 충분한 지분보유를 허용하는 것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주식 처분 문제는 별개로 검토할 사항이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대로 보유한 비금융주력자가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스스로 유의하여 사전에 계열분리 또는 단계적 지분매각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응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IV. 핀테크에의 적용

1. 의의

- 첫째, 핀테크의 발전과 함께 금융산업구조의 전반적 변화
 - <1> 판매주도의 금융산업구조 변화는 특히 금융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 / 판매주도의 금융업구조개편 / 지급수단의 확대로 확인
- 둘째, 금융규제의 대상으로서의 금융회사의 제도적 의의
 - 전통적인 금융규제는 중개기관인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구축
 - 최근의 기술발전은 이러한 접근에 변화를 야기
 - <2> 탈중개화
 - 블록체인은 중개기관이 없는 금융업 모델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금융규제법상 중대한 의미
 - 탈중개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P2P 보험은 보험회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증권거래소와 인수인 그리고 은행을, P2P 대출 플랫폼은 은행과 다른 대출기관을, 로보어드바이저는 전통적인 금융자문업자를 탈중개화
 - 그 결과 여신과 투자 그리고 자문 등 금융서비스제공자와 그 이용자 사이의 직접연결현상이 발생
 - <3> 빅테크나 핀테크로 불리는 비금융업자의 금융업진출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

2. 판매주도의 금융업변화

1) 제조와 판매의 분리와 재결합

가. 오픈뱅킹과 판매업

- 오픈뱅킹(open banking)
 - “금융회사(정보제공기관)가 보유하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업자(정보수취기관)에게 API를 사용하여 제공하고, 제3자업자들이 그 정보에 기초하여 제3자업자들이 스스로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
 - 오픈뱅킹은 핀테크기업 등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정보주체인 고객의 중간에서 고객의 위탁을 받아 공개 API를 통하여 결제지시를 대행하거나 계좌정보를 포함한 금융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
- 그러나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고객의 위탁을 받아 대출이나 예금을 중개하거나 자문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음

나. 금융기능의 다양화와 금융업무의 분화

- 금융기능의 다양화는 여신, 자산운용, 위험관리 등 기존 금융업의 기능에 변화를 초래
 - 특히 지급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봄
- 지급수단의 다양화
 - 첫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재화나 용역의 구매대금지급수단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신용카드를 단순송금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송금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
 - 신용카드회사들도 개인간 송금서비스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와 같이 신용카드의 단순 송금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
 - 둘째, 국내에도 실물카드 또는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Face Pay)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허용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 안면인식정보 등록시 실명확인이 필요하나, 신청인이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한 것
 - EU도 지문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지급업무의 확대

- 전통적으로 지급업무는 은행이나 송금업자를 통한 송금이나 은행간 자금이체를 의미
- 지급업무의 확대는 지급업무의 수행주체의 확대와 지급업무 자체의 확대로 구분
 - 첫째, 종래 지급업무의 확대는 주로 수행주체를 중심으로 논의
 - 전통적으로 은행에 한정되었던 지급업무를 비은행 금융회사나 비금융회사로 확대하려는 움직임
 -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업무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과금서비스,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이체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자금이체업무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
 - 은행법상 지급업무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시점에서 지급업무를 은행의 배타적 고유업무로 볼 것인지의 논의를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둘째, 현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급업무 자체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
 - 단순히 '지급수단'이 아니라 '업무' 그 자체가 다양화
 - EU PSD2에서 명시한 계좌정보업무(AIS)와 지급지시전달업(PIS)(Annex I, 7-8), 일본의 은행법상 전자결제등대행업자(2조 17항),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상 종합지급결제사업자(안 36조의5)와 지급지시전달업(안 2조 2호의6)은 대표적인 사례

2) 고객과의 접점의 이동

- 이러한 변화는 결국 고객과의 접점을 이동
- 전통적으로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창구를 중심으로 고객과의 접점이 형성
- 그러나 은행 영업점 구조의 변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등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수요의 충족 등을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 판매채널은 온라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 금융규제의 중점은 고객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음

3) 전통적인 법개념과의 충돌

-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법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금융규제의 적용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음
- <사례1> 네이버 통장 / <사례2> 판매업무 겸영

3. 탈중개화

- 핀테크의 보험분야에서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슈어테크(InsurTech)는 비교사이트, 보험중개의 디지털화, 보험의 cross sells, P2P보험, on-demand 보험, 보험업무의 디지털화, 빅데이터분석 및 보험소프트웨어, IoT,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의 활용 등으로 발전
 - 금융규제의 기본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P2P보험
- 금융위는 P2P(Peer-to-Peer)보험을 "동일 위험을 보장받는 그룹에 대해 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환급하는 상품"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서비스 지정과 제도개선 병행할 계획을 발표
 - 최근 발표에 따르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에 한해 P2P보험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특화 모집인 제도 도입,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등 규제 완화도 검토
 -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P2P보험의 구조는 보험중개업자모델, 보험회사모델, 플랫폼제공자(Platform provider) 모델로 구성
 - 특히 플랫폼제공자모델에서는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업에 관여하지 않는 모델로서 영국의 Teambrella나 중국의 TongJuBao가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

- 이와 관련하여 P2P보험이 보험법 및 보험업법상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 일본에는 영국의 Teambrella를 대상으로 “보험업법은 보험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호구조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 국내에는 “상호 부조라는 제도의 배경과 구성원 스스로 경영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P2P 보험은 상호보험의 이상적(理想的)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일응 유사성을 갖는다”고 하고, “계약 측면에 있어서는 상법 제664조에 의거한 상법 보험편의 준용 여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견해

- 현행법상 금융규제의 대상으로서의 금융업자는 금융상품의 제조나 판매 또는 양 기능을 모두 수행
 -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 금융규제모델은 작동할 수 없음
 - 그러나 판매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나 위험관리비용이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는 거래구조를 안정성을 갖추어 제공할 수 있다면 금지할 이유가 없음

4. 비금융기관의 참여

1) 의의

- 핀테크의 발전은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의 계기가 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통신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업자가 아닌 기업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
 -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빅테크에 의한 금융업 참여는 직접 참여형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업자와의 업무제휴를 통해서도 이루어짐
 - 미국의 신용카드 기반의 결제업자인 Square가 결제업무의 고객인 사업자에 대한 용자와 예금상품의 제공을 목적으로 산업금융회사(industrial loan company)를 설립한 것도 유명한 사례
 -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자는 은행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규제되지 않기 때문
 -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은행지주회사법상 금산분리규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2) 공정경쟁과 금산분리

- 이러한 변화는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의 경쟁과 함께 금산분리문제를 발생
- 국내에서는 이미 정보공유의 범위와 관련하여 빅테크와 전통적인 금융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관점이 현실화
 - 빅테크 또는 핀테크의 금융업진출은 기관단위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관점과 함께 동일 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라는 기능별 규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
 - 특히 제조와 판매의 분리현상의 강화에 따라 판매에 관한 기능별 규제의 관점이 더욱 중요해질 것
- 금산분리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한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집중적인 논쟁의 대상
 - 일반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에도 금산분리의 관점에서 많은 논의

3) 진입규제의 개편

- 공정경쟁과 금산분리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금융업 진입규제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과 같이 허가나 인가 또는 등록업무단위를 세분화하는 방법도 논의될 필요
- 미국 통화감독청이 도입한 특별목적 국법은행(special purpose national bank)은 그 사례
 - 이는 신인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는 특별목적국법은행은 예금수취, 어음지급, 대출이라는 3가지 핵심은행업무 중 하나를 취급해야 함
 - 이 핵심업무 이외에 특별목적국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국법은행에 허용되는 업무로 제한
 - 핀테크 기업은 이 은행 인가를 받아 예금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출과 지급업무를 할 수 있음
- 일본의 은행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환거래만을 하는 은행도 은행법상 은행으로 규제(동법 2조 2항)

- 국내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안 36조의5)에 대해서도 그 취급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상 예금과 대출업무를 제외한 환거래만을 할 수 있는 은행업 인가 단위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은행규제의 틀내로 수용할 수 있음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고객자산
 - 지급수단인 '계좌'와 은행법상 예금과의 구별 및 고객자산의 별도예치 및 보호를 통해 은행과의 차별성을 확보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계좌는 법률상 금전소비임치구조를 취하여서는 안 됨
 - 예금을 지급수단으로 하는 지급업무는 은행법상 은행의 배타적 고유업무임
 - 입법론으로는 미국의 특별목적은행이나 일본의 은행법상 환거래전문은행을 도입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상 거래액 기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거래소 허가를 강제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동일하게 지급업무취급액기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은행법상 환거래전문은행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할 수 있음

-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의 제조가 아닌 순수한 판매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금산분리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
 - 특히 금융상품의 제조에 수반되는 자금의 수취나 공급기능이 배제될 경우 그러한 우려는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
 - 따라서 순수한 금융상품 판매기능만을 수행할 경우에는 금산분리원칙 및 그에 기초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V. 결론

- 은행과 산업의 분리 또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의 근거는 유효함
 - 금산분리규제는 특히 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의미하는 핀테크의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금융규제법상 기본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함
- 그러나 고객 자금의 수취나 제공과 무관한 판매주도의 금융업에 맞는 금융법체계의 도입 필요성 및 금산분리규제의 적용 제외 검토
 - 은행법상 예금과의 구별 및 고객자산의 별도예치 및 보호를 통해 은행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
 -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류라는 관점에서 금융업의 기능별 재평가 필요
- 금융업규제단위로서의 금융업자의 의미를 재음미하여 새로운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체계의 정비 필요

<참고문헌> [구체적인 인용은 아래 자료의 각주와 인용을 참조]

- 정순섭, "기술발전과 금융규제법의 전망", BFL **2021년 5월호 (107호)**
- 정순섭,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법적 연구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2021년 한국상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상사법의 최신 입법과 과제", 2021.2.26., 발표자료 <<http://www.korcla.net/Notice01/popup.asp?idx=190>> (2021.4.30 방문)
-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